

## [ 오피니언 ]

## 금남로에서

정재현



4·9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났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을 자민에 빠트리지도 않게 하고, 야당은 절망에 빠트리지도 않게 한 민심의 '황금분할' 선택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보수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모두가 일리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지방민심이다. 4·9 총선의 지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확연하게 갈라졌다. 수도권은 여당을, 비수도권은 야권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18번의 총선 가운데 이번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민심이 대비된 적은 없다. 비록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별 쓸립현상은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민심이 이토록 다른지는 않았다.

## 수도권과 지방 대결구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서울 48석 가운데 40석을 석권하는 등 수도권 111석 가운데

## 정부·여당에 등돌린 지방 민심

완패였다. 제주도 역시 3석 중 단 1석도 건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영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때 영남권 64석 전 의석을, 17대에는 68석 중 61석을 훨씬超过了. 그러나 18대에서는 68석 가운데 46석을 얻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방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원인을 두고 말이 무성하다. 영남권은 박근혜 정서, 대전·충남은 자유선진당 바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

는 보지 않고 숲만 보고 하는 소리다. 박근혜 정서도, 자유선진당 바람도 없는 강원도와 충북, 제주도의 민심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드린지 지방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가 뭘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각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아직 지방민심을 모르는 듯 하다. 알고 도 모를 체하는 이해할 수 없다.

지방의 현실은 참담하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의 유단을 맞은 지방건설 경기는

붕괴 직전이다. 서울 대형 유통업체의 두 차별적인 침투로 지방 재래시장과 서비스업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우수한 지방인재는 좋은 교육환경과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서울로 물려가고 있다. 지방의 문화·예술은 척박한 토양 위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 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최근 부산시장이 한 중앙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차라리 '서울 공화국'으로 불러라"고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 지방 현실 직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지방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편철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균특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칼을 들이댈 모양이다. 15일자 2개 유력 중앙지가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의 보고서를 각각 1면 톱으로 게재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유력 중앙지에 국가기관의 보고서를 훑어온 의도가 의심스럽다. 필자의 기우(杞憂)이길 바라지만 혁신도시를 크게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려는 수순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9 총선'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좌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행정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바른 판단이다. 그렇다면 균형발전 없이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지방경제 회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행정이 불가능하다.

지방 살리기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다. 지방이 건설해야 수도권이 살고 국가도 발전한다. 정부·여당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이 민의(民意)를 받드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 민심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 시설

## 균형발전 핵심 '혁신도시' 흔들지 말라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작'으로 규정해왔다. 총선이 끝나면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것이다.

정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균형 발전'에서 '지역특화발전'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구 유입과 분양가 등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감사원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목되는 것은 시집이다. 총선이 끝난 지 1주일만에 정부가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나선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총선 표를 의식해 그동안 유보해온 혁신도시에 대한 수정작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 뻥 뚫린 방역망에 전국 확산되는 AI 공포

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활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20도 안팎의 날씨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AI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AI 확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대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방역을 전담한 지방 방역기관이 인력 부족과 비 전문성으로 우왕좌왕한 사이 AI는 급속히 확산했다. AI 발생 초기부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했다. 허술한 초동 방역체계가 사태를 겉잡을 수 없이 악화시킨 것이다.

AI 방역은 당국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서둘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총선은 끝났지만 정치권은 기우거리의 '풀리페서(polynomial professor·정치 교수)'에 대한 찬반여론으로 말이 많다. 전문지식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의 측면도 적지 않다. 전자와 같이 순수한 마음에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뛰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교수들이 후자와 같이 명예욕으로 나서는 경우가 허여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교수들도 대부분 다시 강단에 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 때는 자동휴직 처리되는 규정이 있지만 낙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26명의 교수

들이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 이 중 12명이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비례대표에 출마한 16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그러니까 총 42명이 도전, 19명이 뜻을 이룬 셈이다.

사회 여부야 당선자들의 뛰어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찌 할 것인가.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

## 천륜 저버린 해외 고려장

고려시대에 기근이 심해 성행했다는 고려장. 이것은 요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다.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해외고려장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노부부가 자신의 딸들을 만나려고 해외에 나가게 되었다. 딸들은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재산을 정리토록 했고 여는 부모와 미간자리로 자식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노부부는 재산을 정리한 후 딸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로 떠났다. 그러나 딸들은 재산을 받고 영주권 획득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비자민료로 한국에 다녀오는 사이에 종적을 감춰 노부부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머니면 이국 땅에 버려지게 됐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동방에 위치한 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어느 성자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쉽게 넘겨듣지 않던 나라에서 해외 고려장이 도내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자신의 힘든 현실로 치부하기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다. 실제 고려장에서도 자식들은 그 자식들의 행동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 역시 부모를 통해 나온 것이다. 그 자식들은 부모를 배우는 법, 앞으로 이러한 천륜을 저버린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다.

▲인턴 독자: giant216@naver.com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대 K 교수는 이번 학기 강의를 맡았다가 출마로 인해 다른 강사로 수업을 대체했다. 낙선 후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지만 서울대 인사 위원회는 교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권고사직'을 논의중이다. 나머지 교수들은 K 교수와 달리 교단 복귀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또 당선자들 가운데서도 3선 K 의원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 풀리페서

이같은 풀리페서들의 행태에 대해 예전과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인재풀이 적은 우리나라로서 애전 분위 등의 장점으로 경쟁력이 높아 하지만 교수가 교단과 정치를 넘나드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점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여부야 당선자들의 뛰어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찌 할 것인가.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 여부야 당선자들의 뛰어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찌 할 것인가.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사 회 2 부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 치 부 2200-616 문화예술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18>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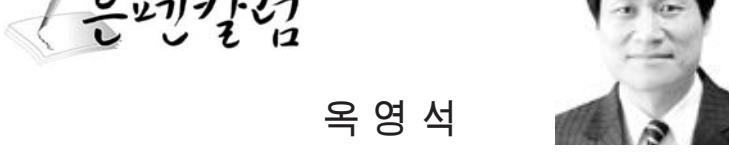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옥영석

## PB상품의 양면성

대형마트들의 PB상품들이 유통시장에서 연이은 화재를 낳고 있다. ○마트 롤라와 ○○콜라의 자존심 대결에 이어 라면과 즉석밥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 상품들이 대형마트의 위력에 고전하는 추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 누가 이기든 가격경쟁의 희대를 볼 수 있어 좋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만도 아닌 듯하다. 국내 빅3 대형마트들은 개별적으로 3천~5천 가지 품목에 이르는 PB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10~20%에 달한다. 같은 상품이라도 제조업자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NB(National Brand)상품에 비해, 유통업자의 상표를 달고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상품은 기획과 가격결정권 등 주도권을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경쟁

상품에 비해 판매가격은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효자종목인 것이다. 그러나 이 PB상품들을 자세히 들여보면 해외에서 생산해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자에게 돌아갈 마진을 줄이면서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생필품 위주로 해외 직구매에 주력해왔던 대형마트들은 최근 소비자를 위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틈을 타 식품과 농산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바나나, 망고, 오렌지 등 열대과일 위주의 수입 형태에서 포도와 단호박, 쇠고기와 수산물까지 품목을 확대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장기적으로는 마늘, 양파 등 우리 농업인들의 주작목까지 해외직구매에 나서게 될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중앙회 차장·2005년 7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광주일보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